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유례 없는 속도로 조성”

홍지선 국토부 장관, 광주군공항 방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 등 현장 점검해
闊시장, 무안국가산단 조기 지정 건의
산단 후보지 확대·정주여건 개발 요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군공항을 찾아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산업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공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광주 군공항에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공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둘러본 뒤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약 25만평 대규모 평탄한 부지와 광주송정역 등 광역교통망이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동 군공항 부지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를 확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특히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는 기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우선 검토 대상으로 단계적 부지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장관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유례없는 속도로 조성하고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정부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홍 장관에게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 산정지구 등 주변 정주여건 조기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 탄약고 예정 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홍지선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만큼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 군공항 부지를 찾아 반도체 공장의 조기 착공과 신속한 건설 의지를 밝힌 데 이어 1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14일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했다.

특별시는 반도체산단 조성계획에 기업의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기업의 투자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함께 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 반도체 공급망, 후공정부터 키워야”

광주연구원 정책토론회

패키징 역량쌓아전공정 연계...업체 유치

전력반도체 등 지역 특화 분야 육성도 병행

전남광주 지역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려면 기존 후공정·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협력업체 구조를 분석해 기업 육성·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생산시설(팹·Fab) 유치 효과를 지역 기업 성장으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팹 가동 전까지 지역의 후공정·패키징 역량과 공정 인프라를 강화해 전공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로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등 특화 분야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가스·화학물질과 장비 유지·보수 등 팹 인근의 신속한 공급·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참여 가능 영역으로 꼽았다. 광주권 뿌리산업·정밀 가공과

전남권 화학 소재 기반을 공급망과 연결하고, 삼성·SK하이닉스와 글로벌 장비 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험·검증 시설은 다른 지역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내놴.

조진희 충북연구원 경제미래연구부장은 청주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앵커기업과 연계된 1·2차 협력업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공백 분야는 외부 기업 유치로 채우고 지역 기업은 업종 고도화와 전환을 통해 참여시키자는 취지다.

토론에서는 지역 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다뤄졌다. 김운섭 조선대 첨단캠퍼스본부장은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발굴을, 박재복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품질관리와 수요기업 검증·구매 평가 연계를 강조했다.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양산 수준의 검증 실적을 쌓을 공동 팹과 전문인력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산업·정밀 가공 기업의 성능·신뢰성 평가와 공정 전환 지원을 역설했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전남 동·서부권의 재생에너지·화학 소재 산업을 연계 육성해 반도체 투자 효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진 기자

국립의대 추천 공정성·자료 공개 놓고 ‘신경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

문예준 “검증자료 공개 시민 판단 맡아야”

교육부 소명 요구·부지 확보 적정성 추궁

闊시장 “조만간 서남권 타운홀 미팅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남권 의원들이 나흘째 시정질문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자료 공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민형배 시장과 공방을 이어갔다.

문예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15일 제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과 교육부 소명자료 비공개 문제 등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특별시가 공정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정작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과 의회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시장은 “교육부가 요청한 자료는 국회에서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다”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후보 대학 추천 이후 부지 확보와 평가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점도 거론했다.

문 의원은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약속서를 두고 심사 과정에서는 부지 확보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다”며 “소유권과 사용 권한, 인허가도 확보되지 않은 땅에 만점을 준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 시장은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후보 대학 선정 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부지 확보의 확실성은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과의 불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서남권 주민들이 지난 4여일 동안 기다린 것은 어떤 대책 발표가 아니라 시장님의 진정 어린 한마디였다”며 “시장이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조만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